

<<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결과 브리핑 >>

(2차) 금융·가계부채 분야

- 과중·한계채무자와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위기 극복 대책 제안 -

2023.3.15.(수), 오후 4시 40분,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

- ‘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(총 8회)’ 는 지난 1월 12일 이재명 당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‘9대 민생회복 프로젝트(#붙임1 참조)’ 일환으로 당면한 민생 위기 극복 해법을 추가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음
-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(원장 정태호 의원)과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(위원장 박주민 의원)가 공동 주최하고, 직능단체, 시민단체, 노동계, 학계 등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과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소속 39명의 국회의원이 정책과 입법과제를 전담·추진하는 ‘과제별 책임의원(#붙임2 참조)’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음
- 오늘 토론회에 앞서 지난 3월 6일 박주민, 민병덕, 김성주, 신동근, 오기형, 양경숙 의원 등이 참여하는 ‘책임의원 정책간담회(금융 분과)’를 열고 토론회 세부 토론 의제 및 정책입법과제에 대해 논의하였음
- 오늘은 ‘책임의원 정책간담회’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, <금융·가계부채> 분야 ‘과중·한계채무자와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위기 극복 방안’을 주제로 가계부채 심각성과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책임의원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이 발제·토론을 진행했음

-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은 ‘책임의원 정책 간담회’와 오늘 토론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제안된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 한 후 국민이 공감하는 「민생회복 정책입법과제」를 만들어 나갈 것임. 이를 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에게 제안하고, ‘과제별 책임의원’ 중심으로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
-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가계부채 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

1. 가계부채의 심각성

- 1) 한국은 세계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% 넘는 4개국 중 하나

※ [참고] 국제결제은행(BIS) 2022년 3분기 '신용 통계(Credit statistics)'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**105.3%로 세계 43개국 중 3위(스위스 128.9%, 호주113.6%, 한국105.3%, 캐나다103.2%)** / 국제금융협회(IIF) 2022년 4분기 '세계 부채 모니터(Global Debt Monitor) 보고서'에 따르면 한국의 4분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추정치는 102.8%로 여전히 100%를 상회 /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(2023.3.6.) 전세 보증금을 포함한 국내 가계부채는 2022년 3000조원에 육박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OECD 국가 중 1위

- 2) 주요 선진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정부부채(국가부채) 비율보다 낮으나, 한국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정부부채(국가부채) 비율보다 높고 가계부채 비율 상승폭도 정부부채 비율 상승폭보다 큼

※ [참고] 2019년 95.0%였던 국내 가계부채 비율은 2020년 103.0%로 8%포인트 높아짐. 이 기간 정부부채 비율은 42.1%에서 48.7%로 6.6%포인트 상승함.(자료: 국제결제은행(BIS), 기재부)

- 3) 주요 국가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100% 넘을 때 한국은 54% 정도로 양호한 반면,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경우 G20 평균이 약 60%인 반면 한국은 100%를 상회

- 4) 결론적으로 한국은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여 가계부채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

2. 윤석열 정부 가계부채 대책의 한계

- 1) 다른 국가들이 에너지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통해 고물가로 고통 받는 서민을 지원할 때, 윤석열 정부는 부자와 대기업 감세(종부세, 법인세 등)와 재정건전성을 내세우며 난방비 등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관리물가 인상을 방치하고 있음

※ [참고] 관리물가는 소비자물가지수를 구성하는 458개 품목 중 정부가 가격결정에 직접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40개 품목의 물가를 말하며, 소비자물가지수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% 정도로 높아 이들 품목 가격 불안정이 바로 소비자물가 불안으로 이어지게 됨. 2023년 1월 관리 품목을 제외한 물가상승률은 5.0%, 관리물가 상승률은 5.8%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5.2% 높아진 이유임. 특히 전기료, 도시가스는 전체 관리물가 상승분의 약 80%를 차지(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)

- 2) 공공임대, 지역상권 활성화(지역화폐), 공공의료 등 취약계층과 중산층 지원예산 대폭 감축
- 3) 다주택자 대출규제 해제 등 부채를 통한 경기부양에 나서며 가계부채 관리정책 포기

3.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· 을지로위원회가 제안하는 가계부채 대책

- 1) 최근 정부가 ‘부동산 대출규제 정상화’를 이유로 DSR(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) 규제의 예외 범위를 늘려가고 있음. 가계부채 관리의 최후의 보루로 DSR 규제 원칙의 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함
- 2) 주택담보대출을 거치기간 동안 이자만 갚다가 만기에 원금을 전부 일시상환하는 만기 일시상환(Balloon Mortgage) 형에서 20~30년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 갚는 장기모기지론, 즉 안심전환대출로 전환 필요함
- 3) 기준금리 인상에 편승하여 시중은행들이 가산금리 확대 적용하여 폭리 취하는 것 막기 위해

- 가산금리 기준 공개하고 은행의 독과점 지위를 남용한 금리인상 등 담합 여부에 대해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
- 4) 폐업을 고민하는 자영업자들이 여기저기 빚을 끌어들이다 폐업·파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
- 배드뱅크(새출발기금) 및 파산·회생 등 채무조정 이용 지원, 재창업 및 업종·직업전환 등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원스톱 지원
 - 이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(우선 광역자치단체부터 시작, 향후 금융복지상담센터 전국화)하고 자영업자가 자주 이용하는 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하여 상담과 채무조정, 복지, 창업지원 등 원스톱 지원 복합행정 시스템 구축 필요함
- 5) 부채규모 큰 자영업자나 빚 돌려막기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450만 다중 금융기관 채무자 등에 대해서는
- 대환대출을 통해 자력으로 채무변제시기를 연장할 대상자와
 - 개인워크아웃을 통한 소규모 원금과 이자감면 대상자와
 - 법원의 파산·회생을 통한 대규모 채무조정 대상자들을 구분하여 채무자의 상태에 맞는 채무재조정 적극 지원 필요함
- 6) 과중·한계채무자에 대한 법원의 파산·회생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
- 부산, 수원에 설치한 전문 회생법원을 대전, 대구, 부산, 광주로 확대하고 금융복지상담센터 등과 연계한 신속처리 시스템 구축 필요함
- 7) 금리 인상으로 서민 고통이 가중되는 시기에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
- 괴롭히기 추심 금지하고
 - 채무자 보호하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 확대하는 공정채권추심법 개정 등 금융관련 인권제도를 정비해야 함

[붙임1] 당 대표 신년 기자회견 “9대 민생회복 프로젝트” (2023.1.12.)

10대 비상대책	세부내용	법률사항	예산
① 전월세 임대차보증금 이자 지원	- 전월세 이대차 보증금을 대출받은 무주택자 대상 - 대출이자 1%를 정부가 지원, 금융기관 동참 유도	-	0.4조원
② 고금리 개인신용대출 대환대출 지원	- 대부업·불법사금융 또는 법정최고금리 인하(21년 7월) 이전 고금리 대출을 받은 저신용·저소득 서민 대상 - 제도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보증 및 지원	-	0.6조원
③ 코로나부채 이자감면 프로그램	- 2019년 이후 발생한 코로나부채 600조원 에 대해 정부 1.5%포인트, 금융기관 1.5%포인트 등 금리 인하 - 예산 9조원 = 600조원 × 1.5%	-	(당초) 12조원
④ 고정비 상환감면 대출 제도 도입 (한국형PPP)	- 코로나대출 이자감면 프로그램과 연계 - 성실상환 대상자 중심 시행	○ (기발의)	(변경) 9조원
⑤ 한계 차주 저금리 전환대출	- 코로나 대출 800조원의 10%에 대한 초저금리 대출로 전환 - 신보출자(4조원) → 보증배수(10배) → 대환대출 여력(40조원)	-	4조원
⑥ 핀셋 물가지원금 (명칭 변경)	- 물가상승 피해가 계층 중심의 하후상박형 지원 - 예산 50조원 = 1,700만가구(하위 80%) × 15~40만원	-	5조원
⑦ 지역화폐 예산 증액 및 항구화	- 지역화폐 예산 증액 (특별회계 설치) 및 계속운용 - 재원 : 투자/상생협력촉진세제의 법인세액(약 1조원)	○ (미발의)	1조원
⑧ 공공 주택 매입 후 임대 전환	- 삭감된 공공임대예산 5조원 복원 - 미분양 및 부실 주담대 주택 등 매입 후 공공임대	-	5조원
⑨ “프로젝트 파이낸싱(PF) 정상화뱅크” 설립(배드뱅크)	- 미분양 및 부실채권 대책(비은행권 PF 정상화) - 부실기업 정리가 아닌 정상화가 목적, 비은행권 출자 참여 핵심	-	2조원
9대 민생회복 프로젝트		(당초) 총 30조원 (변경) 총 27조원	

*2023.1.12. 신년 기자회견 당시 ‘9대 민생회복 프로젝트’ 예산은 총 30조원 규모였으나 이후 “③ 코로나부채 이자감면 프로그램”의 **코로나부채** 규모가 800조원에서 600조원으로 수정됨에 따라 당 예산도 12조원→ 9조원으로 변경되고 총 예산도 27조원으로 축소됨

[붙임2] '과제별 책임의원' 신청 현황 (총 39명)

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> 책임의원 신청 현황 (2023.3.2.현재)					
no	국회의원	비고	no	국회의원	비고
<1차> 총론(3/8)			<5차> 소상공인(4/5)		
1	박주민	좌장	1	서영교	좌장
2	김영배	간사(토론)	2	이동주	간사(토론)
3	우원식		3	김경만	
4	민병덕		4	김주영	
5	정태호		5	민병덕	
6	홍기원		6	박주민	
<2차> 금융(3/15)			7	윤영덕	
1	박주민	좌장			
2	민병덕	간사(토론)	<6차> 노동/고용1-특고(4/12)		
3	김성주		1	이학영	좌장
4	신동근		2	이수진(비)	간사(토론)
5	오기형		3	어기구	
6	양경숙		4	최인호	
7	이동주				
<3차> 주거·부동산(3/22)					
1	전혜숙	좌장	<7차> 노동/고용2-문화예술(4/19)		
2	조오섭	간사(토론)	1	홍익표	좌장
3	박상혁		2	유정주	간사(토론)
4	서동용		3	김승원	
5	윤준병		4	소병훈	
6	이수진(지)		<8차> 노동/고용3-돌봄(4/26)		
7	홍기원		1	남인순	좌장
<4차> 중소기업(3/29)			2	최혜영	간사(토론)
1	정태호	좌장	3	권인숙	
2	김경만	간사(토론)	4	서영석	
3	김교홍				
4	김한정				
5	이용빈				
6	이용선				
7	이원욱				
8	이장섭				